

한미 FTA와 양극화 대응의 동시 추구

-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의 구체화 -

2006. 3. 3

- I.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 / 1
- II. 한미 FTA의 의의 / 4
- III. 양극화 대응의 의미 / 10
- IV. 한미 FTA · 양극화의 상호 보완성 제고 / 15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 덕 수

I.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

①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시장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매진

○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시스템 개혁 추진

- (금융부문)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구조조정 등 금융시스템 선진화 노력 강화

* 통합거래소 출범, 장기국채 발행 등 자본시장 저변 확충, Negative-List 방식의 금융규제 개혁, 자본시장관련 법률 통합(06.2월 방안 마련) 추진

- (기업부문)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12월)을 통해 기업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시스템 구축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합리적 개선, 증권집단소송제·美 사베인-옥슬리 법제 도입 등

- (노사관계) '노사 자치주의', '법과 원칙'에 따른 자율·책임 노사관행 형성 등 노사관계 선진화노력 강화

- (외환부문) 05.7월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등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이어 금년 1월 외환자유화 확대

○ 경제여건 및 성숙도를 감안하여 개방·경쟁의 원칙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실천

- 대내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성을 살려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특구제도와 이를 활용한 동북아 물류허브전략 추진

-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같은 거대경제권과의 FTA에 앞서 시범적으로 한·칠레 FTA(04.2 비준), 한·싱가폴 FTA(05.12 비준), 한·EFTA FTA(05.12 정식서명)를 추진

② 한편, 양극화 해소를 사회적 의제로 삼고 정책적 노력을 경주

○ 개방과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화되는 양극화 해소에 주력

- 특히 소득 양극화 완화를 위해 탈락하는 사람들과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추진

*최저생계비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호 범위 확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내실화

*의료급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추진 등

- 그 결과 소득분배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차단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조세研, 06.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시장소득 지니계수(A)	0.314	0.269	0.283	0.275	0.284	0.298	0.306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B)	0.306	0.259	0.272	0.262	0.272	0.279	0.286
차이(B-A)	0.008	0.010	0.011	0.013	0.011	0.019	0.020
개선율((B-A)/A)	2.6%	3.9%	3.8%	4.7%	4.0%	6.2%	6.6%

*주: 1) 도시가계 기준

2) 시장소득 = 총소득 - 공적이전소득

3) 가처분소득 = 총소득 -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 이와 함께,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지역간·계층간 혁신 능력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복합도시, 공기업 지방이전을 수반하는 혁신도시, 기업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기업도시 건설과 함께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

- 중소기업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 추진

- 자활급여 등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 근로와 연계된 복지(workfare) 지원

-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교육·훈련 등 인적투자를 확대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 배양

③ 이러한 참여정부의 시장주의와 분배 개선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 상호 상반된 비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철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

- 일각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反시장·反기업적이고, 성장보다 분배를 우선시한다는 비판
-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철학에 충실하여 오히려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

④ 참여정부 4년째를 맞아 이제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

- 참여정부는 효율 제고를 통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지만, 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 동반되어야 건강한 성장·발전이 지속 가능하다는 철학에 기초
 - 성장과 분배는 비행기의 양날개, 수레의 두바퀴와 같은 것으로서 양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 중요
 - 「경쟁·개방을 통한 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등 분배 개선 노력→ 효율 제고를 위한 개혁기반 성숙→성장 기여」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추구

⑤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동반성장 전략 구체화의 발현

- 한미 FTA는 시장경제의 대표주자인 미국 경제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
- 아울러 양극화 대응을 본격화함으로써, 시장경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통합을 도모

II. 한미 FTA의 의미

1.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 ◇ 생존을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일류로 가는 길밖에 없으며 개방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가능성조차 사라짐
- ◇ FTA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최고와 당당히 겨루어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계기

① “개방한 나라가 성공도 하고 실패한 경우는 있었지만, 쇠국을 하면서 성공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음”(대경위시 대통령 말씀, 2.16)

- 부존자원이 취약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 증대 이외에 생존을 위한 다른 대안이 없음

* 무역의존도(04년, %) : (한국)70.3, (미국)20.0 (일본)21.8 (영국)37.2 (태국)117.9 (말련)196.1

- 특히,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생산성 혁신의 본고장인 미국과의 FTA는 일부 부문에 가져올 손실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기회이며, 해 볼만한 시도임

- 만약 이러한 예비적 위험이 두려워 결국 개방을 이루어내지 못할 경우 우리 옛 속담처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과오를 범하게 될 우려

* 과거 주변국보다 개방에 뒤져 아픔을 겪었던 구한말의 실수를 재연해서는 안 될 것임

-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도약의 틀로 삼아 추진해 나갈 필요

□ 한-미 FTA는 정부가 오랜기간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며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성사시킨 것임

□ 한·미 FTA는 NAFTA 이후 최대 규모의 FTA

○ 당초 미국은 한미 FTA 체결에 소극적이었으나, 미 국내적으로 NAFTA 이후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FTA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우리나라에 주목

○ 최근 Portman USTR 대표가 한국의 경제규모와 미국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는 미국 입장에서 NAFTA 이후 가장 의미있는 FTA'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음

* 미국이 체결한 FTA('05년 현재): NAFTA, 칠레, 싱가포르, CAFTA, 호주, 바레인, 모로코, 오만, 요르단, 이스라엘 등

② 실제로 우리 경제는 60년대 이후 수출지향적 불균형 발전전략을 추구하여 「한강의 기적」(고도 성장)을 이룩

○ 수입대체에 치중한 다른 개도국들과 달리 한국은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개방과 경쟁 정책을 적극 추진

- 1960~80년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외자도입과 수출증대 적극 추진(GATT 가입, Kennedy Round 참여, 수출지원 등)

- 1980년대 : 수입자유화(수입수량규제 완화, 관세율인하 등), 외국인 투자 자유화, 대외경제협력(ODA 등)

- 1990년대 : 수입자유화 확대, OECD 가입 및 금융시장 자유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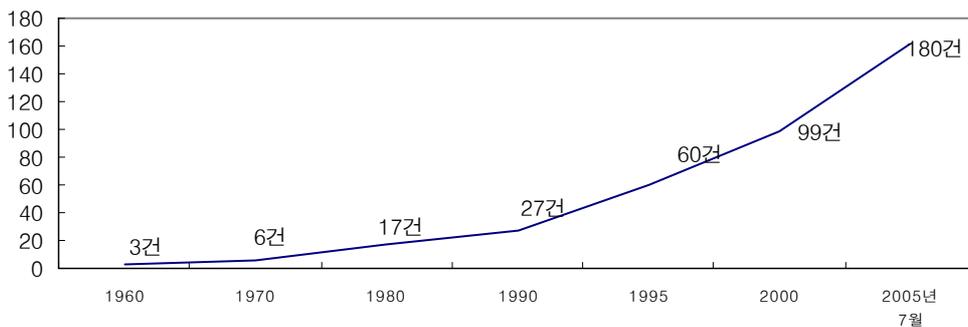
- 2000년대 : 세계 1등상품 육성, FTA 다변화, DDA 적극참여 등

* 1992년 기준 우리나라의 개방화의 잠재이익은 GNP의 약 3.8%~4.3% (약 9.2~10.4조원) 후생 증가로 조사 (김남두, 1996년)

** 1970~80년대 기간중 개방정책을 추구한 개도국은 연평균 4.5% 성장하였으나, 폐쇄적인 개도국은 연평균 0.7% 성장에 그침(Sachs and Warner, 1995)

③ FTA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

- 과거 개방의 득실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으나, 이제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
 - 94년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 자유무역체제가 더욱 공고히 되었고 90년대 이후 지역주의가 대두되면서 지역경제협정체결이 급증
 - 전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FTA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현재 WTO에 통보된 180건의 지역협정 중 120건이 90년대 후반에 체결되었고, 2005년말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FTA만 50여건



	'55-'60	'61-'70	'71-'80	'81-'90	'91-'95	'96-'00	'01-'05. 7월
신규	3건	3건	11건	10건	33건	39건	81건
누계	3건	6건	17건	27건	60건	99건	180건

*자료출처: WTO

- BRICs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 속에 우리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다자간·지역간 개방 추세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에 실패하는 등 세계경쟁에서 탈락하여 국가전체가 주변국가로 전락(marginalization)할 가능성
 - * 국산품 미국수입시장 점유율(%): ('88) 4.6 → ('98) 2.6 → ('01) 3.1 → ('05) 2.6
 - * 대미수출 증가율('05, %): (한국) △5.2, (중국) 23.8, (대만) 0.6, (인도) 20.9

④ 한·미 FTA의 기대효과: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최고에 도전함으로써 우리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FTA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세계일류를 지향해야」 (대경위시 대통령 말씀, 2.16)

○ 한·미 FTA 체결시 국민소득·후생수준·교역·생산·고용 확대 등 전 부문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 예상

○ 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기대효과: 우리 경제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통상마찰을 완화

* 세계수입시장 점유율(04년,%): 미국(21.8%), EU(역외 18.3%), 중국(8.0%), 일본(6.5%), 캐나다(4.0%)

- 한·미 FTA를 기폭제로 캐나다, ASEAN, 일본, 중국, EU, 인도 등과의 FTA 추진도 가속화함으로써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동북아 경제허브 달성

-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

*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유발

-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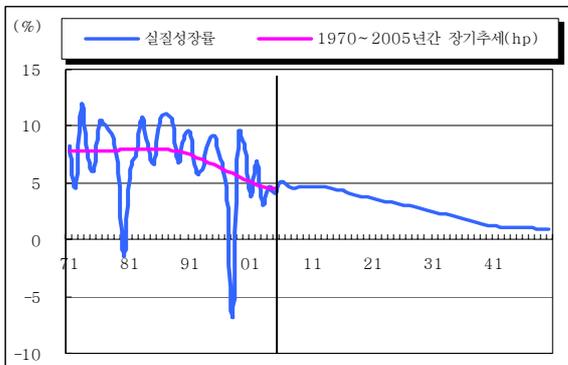
2. 성장잠재력 제고 기반 마련

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경제 성숙화, 고령화·저출산 등에 따라 추세적으로 둔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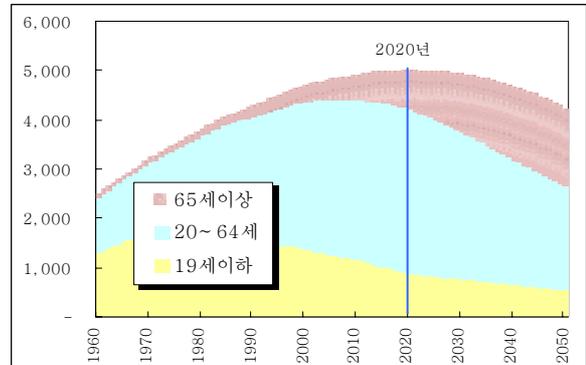
○ 특히, 2020년대 이후에는 노동 투입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의 한계가 뚜렷해 질 것으로 예상

* 잠재성장률 전망(%) : (10년대) 4.3→(20년대) 3.1→(30년대) 1.9→(40년대) 1.0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 추세



우리나라 인구전망



②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가 가장 긴요한 과제이며, FTA 등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은 이를 위한 효과적 방안

○ 개방이 거의 완료된 제조업과 달리 진입장벽과 규제 등으로 개방이 되지 않은 서비스업의 경우 그간 경쟁이 제한되면서 생산성 향상에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90년대 이후 생산성 기여도가 ⊖)

업종별 성장 기여도 (단위 : %, %p)

	75~80		81~90		91~00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 성장률	12.20	7.21	10.58	8.27	7.97	5.34
- 노동·자본 기여도	5.61	8.56	5.62	6.54	3.14	5.47
- 생산성 기여도	6.59	△1.35	4.96	1.73	4.83	△0.13

③ 특히, FTA는 고부가가치형 서비스산업 발전의 촉매제가 됨으로써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

- 금융·의료·교육·법률, 회계 등 기업지원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형 지식기반 서비스는 개방을 통해 선진 경영기법의 이전 및 경쟁을 촉진하여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 제고 가능

* 서비스산업 개방은 외국인투자 진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바, 생산성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 기업의 유치에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노동 생산성 국제비교 (한국=100, 2000년 기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 전산업	192.8	151.7	158.6	189.4
· 제조업	160.8	111.8	92.9	126.7
· 서비스업	219.2	195.3	180.4	199.9

- 한미 FTA를 통한 사업관련 서비스의 육성은 제조업의 혁신 및 생산능력을 촉진하는 효과

④ 또한, FTA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 특히 부품·소재 기업의 발전을 촉진 가능

- 최근 조사결과('06.2 중기협 자체조사)에 따르면, 대미수출입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한미 FTA 체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

-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한미 FTA 체결을 통한 관세 감축·철폐 및 이에 따른 수출증가 효과 기대 반영

- 한미 FTA는 수입원자재 및 부품의 가격인하 효과를 갖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품소재 및 기계부문에 해외 혁신 자원의 도입을 통해 부품·소재기업의 발전 가능

3.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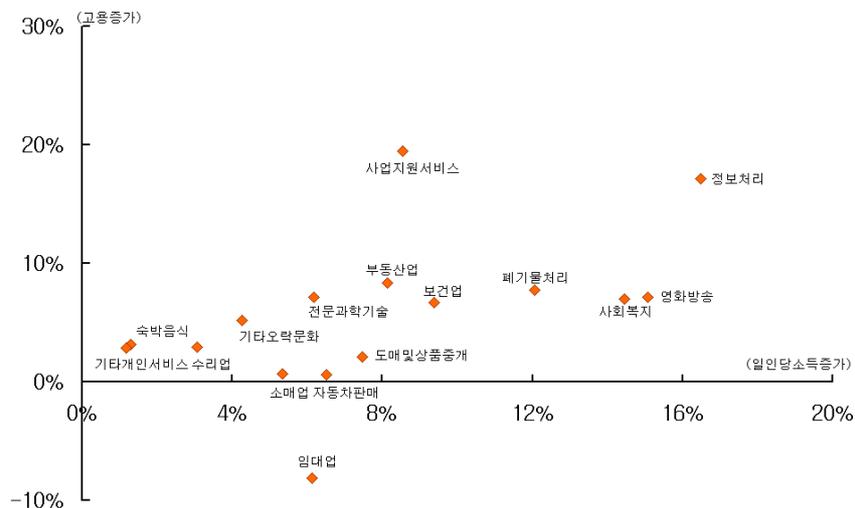
① 번듯한 일자리 창출이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 양질의 일자리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자내 수직적 이동을 활발히 하여 근로자간, 소득계층간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② FTA는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극화 완화에 기여

- FTA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큰 IT산업, 자동차산업,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 서비스산업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고용증가와 1인당 소득 증가율간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고용증가와 소득 증가를 동시에 달성 가능

서비스업종별 1인당 소득증가율과 고용증가율간 상관관계



- 또한, FTA로 인해 증대가 예상되는 외국인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 거양

*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투자가 과거 5년간 창출된 일자리의 20%를 점하는 것으로 분석(LG경제연)

III. 양극화 대응의 의미

1. 사회통합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축

① 복지를 통한 사회통합과 개방을 통한 성장은 '글로벌 강국'이 되기 위한 비행기의 양날개

- 세계경제 편입과정에서 낙오된 계층을 보호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통합노력이 세계화 추진의 사회적 기반
- 산업부문간 양극화는 대내외 충격에 대한 경제의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계층간 양극화는 물적·인적자본 축적에 장애유발

② 대다수 OECD 국가들도 세계화·정보화·고령화 과정에서 시장소득 기준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으나, 잘 완비된 사회보장제도 덕택에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

- 주로 저소득계층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대

하위 20%계층의 사회보장제도(연금제외) 수혜비중 변화

	호주	프랑스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OECD평균
2000년 수혜비중(%)	46.3	33.5	36.7	31.9	33.0	62.2	36.4
1995~2000 증감(%p)	2.2	1.9	3.9	1.4	1.2	2.3	2.7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소득분배 악화를 차단하면서 시장경제를 유지·발전

OECD 국가의 지니계수 추이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중반		2000년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프랑스	0.392	0.267	0.414	0.277	0.403	0.272
독일	0.360	0.267	0.363	0.270	0.393	0.272
일본	0.309	0.276	0.338	0.290	0.362	0.310
노르웨이	0.294	0.222	0.341	0.249	0.363	0.260
스웨덴	0.347	0.224	0.416	0.247	0.375	0.242
영국	0.389	0.277	0.424	0.304	0.432	0.319
미국	0.376	0.326	0.417	0.351	0.420	0.346
OECD 15개국 평균	0.357	0.266	0.395	0.284	0.394	0.291

*OECD,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90s, 2005

*지니계수: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음을 의미

2. 세계화 · 정보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한 사회적 안전판

① 80년대 이후 OECD국가들의 분배 악화(시장소득 기준)는 일반적인 추세이나, 그 양상은 시대별로 차이

- 90년대 중반까지는 저성장 상태에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중상위계층의 소득증가율을 하회
- 세계화 · 정보화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졌던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시현하였고 소득 분배도 개선
 - 성장의 파이를 소득재분배 시스템을 통해 나눔으로써 분배 악화를 보정한 결과

계층별 실질 가구소득 증가율(%)

	1985~1994				1995~2000			
	하위20%	중위60%	상위20%	평균	하위20%	중위60%	상위20%	평균
호주	0.1	△ 0.3	△ 0.4	△ 0.3	1.8	2.5	2.2	2.3
프랑스	1.2	0.8	1.1	0.9	0.0	0.1	△ 0.2	0.0
아일랜드	3.1	2.5	2.4	2.5	5.2	7.7	5.4	6.6
노르웨이	△ 0.4	0.3	0.9	0.5	6.6	5.2	6.3	5.7
스웨덴	0.4	0.7	0.9	0.8	1.3	2.7	4.5	3.2
영국	0.8	1.5	1.9	1.6	2.3	2.6	3.6	3.0
미국	1.1	0.9	1.6	1.2	0.7	0.9	0.5	0.7
OECD평균	0.6	0.8	1.3	1.0	1.6	2.0	2.1	1.9

② 양극화 해소대책은 세계화·정보화에 따라 더 이상 심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

- 세계시장 통합에 따른 발생하는 이익을 하위계층과 공유함으로써 시장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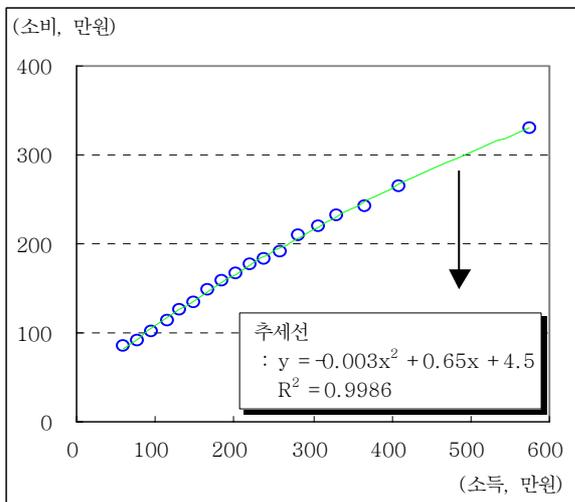
3. 양극화 완화는 성장에도 도움

① 경제 양극화는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의 차이로 인해 소비 위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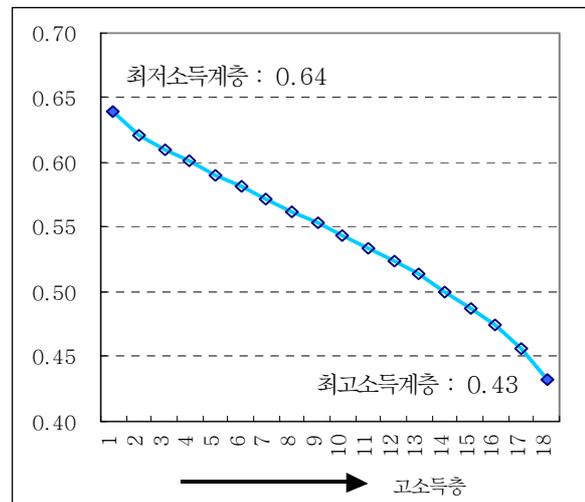
○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을 살펴보면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한계소비성향이 하락(도시근로자 가구 기준)

* 최고소득계층 한계소비성향(0.4 내외)은 최저소득계층(0.6 내외)의 2/3 수준

소득과 소비(소비함수)¹⁾



소득계층별 한계소비성향²⁾



1) 가계수지동향 자료를 이용하여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소비 수준을 표시한 소비함수

2) 소비함수 추세선의 접선 기울기

② 따라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소득이전을 통한 민간 소비 증가와 정부소비 확대를 통해 경제전체의 소비수요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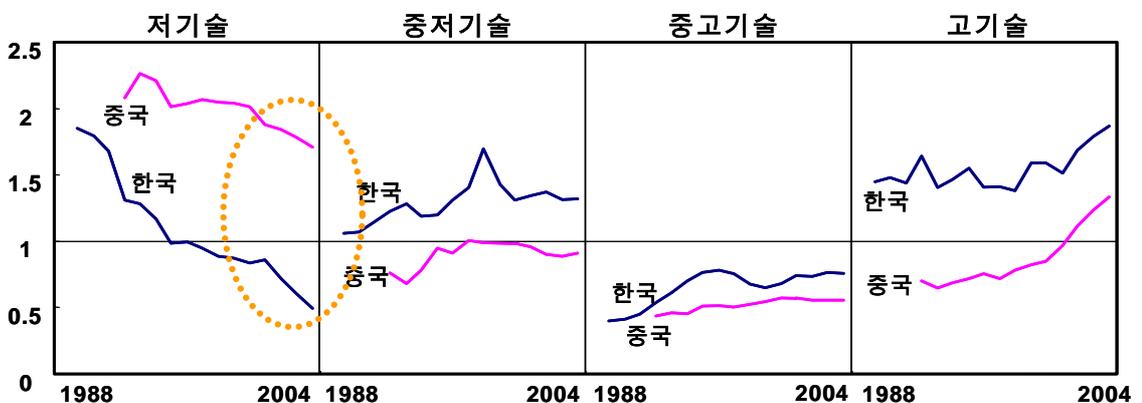
○ 소비증가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으나, 적어도 소득분배의 추세적 악화에 따른 경제 전체의 소비 둔화 완화 가능

③ 아울러, 재분배 정책은 교육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또는 사회통합 등을 통해 고용의 질 낙후를 방지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에도 도움

4. 한미 FTA를 양극화 심화로 단정짓는 것은 杞憂

- ① 양극화는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결국 국제경쟁력이 있는 산업과 없는 산업의 격차임
-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제조업은 일찍부터 국제경쟁에 노출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 농업, 일부 서비스업 등은 이러한 경쟁이 없어 경쟁력 확보에 실패
 - FTA에 따라 상대적으로 뒤쳐진 부분을 도와주고, 자극해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면 오히려 양극화 완화에 도움
- ② 특히, 우리나라의 최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원인중의 하나는 '중국요인'인 것으로 분석
- 중국경제의 부상은 우리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중국과의 무역·투자 확대가 국내 저기술·저부가가치 업종의 사양화를 촉진

기술수준 산업군별 한·중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변화추이



* RCA 지수: 특정국의 품목별 세계시장 수출점유율을 특정국의 세계시장 수출점유율로 나눈 값

- ③ 미국은 중국시장과 달리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세계 최대시장이므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오히려 양극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 우리가 비교우위를 지니거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불평등도의 개선 가능
 - 대미수출입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한미 FTA 체결을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미 FTA로 인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반증
 - 최근 연구에 의하면 미국·캐나다·멕시코간 NAFTA 체결이 임금격차 확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IV. 한미 FTA · 양극화 대응의 상호보완성 제고

1. 성공적인 한미 FTA 타결을 위해 협상을 차질없이 준비

- ① 05. 2. 3일 공식 선언한 한미 FTA 협상은 5~6월경 1차 협상을 시작하여 내년 3월말에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나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데에는 어느정도의 시차가 존재
- 협상의 실질적 타결후 미국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에 따른 미의회 보고, 양국 국회 비준절차 완료 및 협정 발효까지는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
 - * 한-칠레(1년2개월 소요): 협정서명('03.2)-국회비준('04.2)-발효('04.4)
 - 한-싱가폴(1년 소요): 협정서명('05.8)-국회비준('05.12)-발효('06.3)
 - 더욱이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민감분야의 경우 협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확보하여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과 구조조정을 도모 가능
- ② 또한 WTO 협정, 한-칠레 FTA, 쌀 후속협정 등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무역협정 비준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국내적 대응책을 강구해 온 바 있음
- * 119조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04년 수립)
- ③ 따라서 기존에 마련된 국내적 대응책을 기초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각계각층이 고민하여 잘 활용하면 충분한 대비책 마련 가능 예상

2.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대책 강구

① 한미 FTA는 국가전체로 보면 이득을 가져오지만 농업, 서비스업 등 일부 부문에서는 일부 피해가 우려

○ 다만, 농업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며, 가공농산물업의 경우 값싸고 질좋은 원료 확보로 경쟁력 제고 가능

* 미국의 주력 수출품인 대두, 밀, 옥수수, 오렌지 등의 경우 국내 자급률이 낮아 대미 수입 증가 보다는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대체할 전망

· 우리 식량자급률 : 밀(0.2%), 옥수수(0.7%), 유지류(3.3%), 콩(7.3%), 쇠고기(36.6%)

* 한·칠레 FTA시 초기년도 신선과일 피해 예상치는 66억원(한양대)이었으나, 실제 수입증가액은 28억원에 그쳤고 소득보전 집행실적 無

○ 서비스업의 경우 주로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로 영업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개방을 하더라도 모든 서비스분야에 곧바로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님

②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 대책 강구

○ 일차적으로는 협상과정에서 품목별·업종별 민감도를 감안하여 차별화된 협상전략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 (예: 농축산물)

· 쌀 등 식량안보 및 농가경제에 중요한 품목: 예외품목 추진

· 당장 관세철폐가 어려운 고관세 민감품목: 장기간 이행기간 확보 노력

· 국내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수입쿼타 설정 등 활용

○ 최종 협상결과가 가시화되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정밀한 영향 분석을 거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범정부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체제도 구축

- 중소기업, 농업 등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업종과 규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강구

3. 사회안전망을 효과적으로 확충

①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회안전망 재원을 집중 배분

○ 저소득층 위주로 효과가 큰 분야에 정부지원을 집중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주거안정 지원 확대 등
- *사회적 일자리 규모 확대 및 기업형 사회적 일자리 확산기반 마련
- *자활근로사업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등

○ 특히 저소득계층이 상위계층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사회적 사다리(social ladder)' 구축에 역점

- 저소득계층이 '고용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부문별 소득분배 개선(지니계수 변화율) 효과(조세研, 06.1)>

	2001	2002	2003	2004
교육비 지출(%)	3.05	2.49	2.61	3.16
의료비 지출(%)	0.80	0.81	1.37	1.25
주거비 지출(%)	0.03	0.01	0.02	0.00

- 자산형성지원사업(IDA)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산기반 조성

② 사회복지제도의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희망한국 21'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문화복지센터'로 개편하고 인력 재배치 추진
- 복지전산망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분절된 공공서비스간 연계를 추진하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성과평가 체제 개편 등을 통해 우수 서비스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